

# 2014년 전망 보고서

## [한국경제]

2014.01.16 | 정태인 원장 | [ctain60@gmail.com](mailto:ctain60@gmail.com)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세계경제가 지뢰밭 속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정권을 잡으니 미래가 장밋빛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지뢰밭을 잡기는커녕 스스로 만들고 있다.

### 1. 전망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정부의 3.9% 경제성장률

정부는 2014년 경제 전망<sup>1)</sup>에서 경제성장률을 3.9%로 예측했다. 2012년 12월에는 2013년 전망치를 1%p 낮춘 바 있다. 실적치가 말해 주듯이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과거의 행적을 보면 이번의 발표도 그리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림 1] 예산안 편성 시(매년 9월) 정부의 전망치와 실제치의 차이

	예산안편성지침 상 전망치	예산안 편성 시 전망치	실제치
2011년	5.0%	5.0%	3.7%
2012년	5.0%	4.5%	2.0%
2013년	4.0%	4.0%	1.5%(1분기)
2014년	4.0%	-	-

자료: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 등, 각 년도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재정운용방향 및 주요 현안”, 2013.8, p13

1) 기획재정부, “2013년 경제 전망”, 12.27 / <http://goo.gl/flXVAd>

# 2014년 전망 보고서

국회 예정치가 정리한 [그림 1]을 보면 정부의 전망은 2011년 1.3%p, 2012년 2.5%p나 빛나갔다. 어디서 전망이 어긋났는지를 살펴보면 매년 정부는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의 증가에 기대를 걸고 높은 성장률을 전망했다가 3년 연속 실적이 이에 못 미쳤다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세계경제가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엔 과거처럼 많이 틀리지는 않겠지만 소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과도한 낙관은 이번에도 반복된 걸로 보인다.

[표 1] 한국 경제 전망

	'12년 실적	'13년				'14년 전망
		1/4	2/4	3/4	연간 <sup>e</sup>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	3.2	-	-	-	2.9	3.6
Dubai 유가(\$/bbl)	109	108	102	104	105	103
실질 GDP	2.0	1.5	2.3	3.3	2.8	3.9
민간소비	1.7	1.5	1.8	2.1	1.9	3.3
설비투자	△1.9	△11.9	△4.6	1.5	△1.6	6.2
건설투자	△2.2	2.4	7.2	8.6	7.0	2.0
수출(통관, %)	△1.3	0.4	0.7	2.7	2.5	6.4
수입(통관, %)	△0.9	△3.0	△2.8	0.3	△0.3	9.0

출처 : 기획재정부, 2014년 경제전망, 12. 27

[표 1]은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2014년 경제 전망이다. 정부가 예측한 설비투자<sup>2)</sup>를 보면 2012년 -1.9%, 2013년(3/4분기까지를 반영한) -1.6%를 기록했던 수치가 내년에는 갑자기 6.2%로 치솟는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12월에 했던 2013년 전망치도 3.5%였는데 실적은 훨씬 못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번 전망치도 그리 미덥지 못하다. 정부 발표문을 보면 “1인당 GDP가 3만 달러로 오르려면 설비투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 역시 그렇다”고 강조한다(pp5-6). 말하자면 투자가 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투자는 기업의 “야성적 충동”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낙관적 기대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럴 듯한 이유는 찾기 힘들다.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이 표현은 3년째 똑같다)로 인해 수출이 6.4%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수출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등 동아시아가 특별히 수입을 늘릴 이유가 없는데(오히려 하방 위험이 더 큰데) 우리 수출이 3% 이상 증가할 거라는 기대는

2) 설비투자 : 기업이 기계장치, 운영

# 2014년 전망 보고서

과도한 게 아닐까? 아마도 정부는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전방위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펴고 있으니 재벌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런 예측을 하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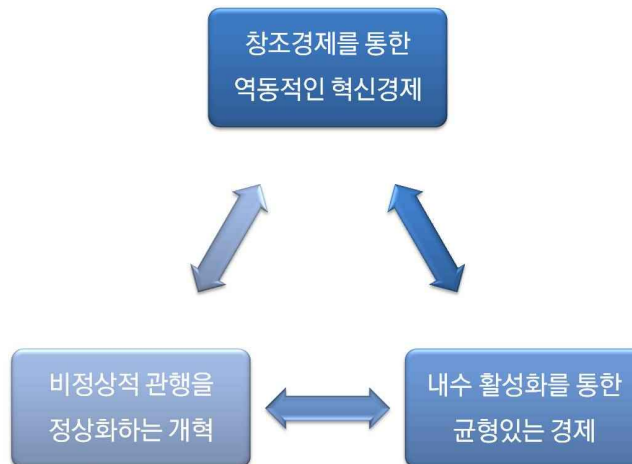
소비는 더욱 문제다. 2011년부터 3년 연속 정부는 민간소비가 3% 이상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지만 실적치는 1%대였다. 투자와 달리 소비는 그다지 변화가 심하지 않다. 특별히 자산가 격이 상승해서 흥청망청하는 시기를 빼곤 그렇다. 정부가 소비 증가의 근거로 삼는 건 물가안정과 고용조건 개선, 그리고 가계흑자율의 증가이다 (p40). 하지만 1-2%의 가계흑자율 개선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가계 부채 1000조를 넘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사교육비, 의료비, 주택 관련 비용이 여전히 가계를 억누르고 있는 한, 소득이 조금 증가한다고 바로 내구재나 준내구재의 소비가 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래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부채를 줄이려고 할테니 말이다.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주로 50대, 여성의 재취업이 늘어나고 있다(pp9-10). 따라서 임금 수준이나 고용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요인들을 근거로 소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전망이라기보다 희망사항에 가깝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한국경제는 정부나 한은의 3.8-3.9% 성장보다는 낮은 3% 언저리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 2. 우려스러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 : 줄푸세

한국의 지뢰밭은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다. “빚을 내서 집사라”는 정책, 어떻게든 주가와 집값을 올리려는 정책은 더 많은 가계 부채를 만들어낼 것이다. 재벌급 대기업들의 경영상태도 그다지 좋지 못한 상태이다.

[그림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



## 2014년 전망 보고서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의 요지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그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은 첫째,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둘째,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셋째, 내수 활성화를 통한 균형있는 경제이다.

말만으론 셋 다 훌륭하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리고 1년 정도의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첫 번째 전략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떠올리고 세 번째 전략인 내수 활성화를 통한 균형있는 경제에서는 임금 인상과 복지확대를 상기할 것이다. 창조경제가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혁신경제라면 참여정부 때부터 모든 정부의 지향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박대통령이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은 엉뚱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 경제 비정상적 예로 원전비리와 부정수급 문제를 들고 나서 “공공부문 개혁”이 바로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물론 공공부문은 언제나 관료적 비효율성을 지니게 마련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개혁은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초점을 맞춰서 노조와 시민이 스스로 해나가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상화 개혁은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 정상화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로 결론을 맺었다. 즉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바로 그 개혁이라는 것이다. 실은 이 자회사 설립이야말로 박대통령이 바로 위에서 한탄한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 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이다.

박근혜 정부의 신종 민영화 전략은 자회사를 세우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역시 부대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을 추가했다. 분명 수서발 자회사는 이익을 많이 낼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반 철도에 대한 교차 보조(코레일의 흑자로 적자노선에 보조금을 주는 것)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코레일은 원래 자기 것이었던 이익을 자회사에 떼어주니까 손실이 더 많이 날 것이다. 이런 게 경쟁이라면 당연히 수서발 자회사가 이긴다. 그 다음 수순은 불을 보듯 뻔하게 코레일 본선도 분당 자회사처럼 운영해야 한다고 나오지 않을까? 말 그대로 민영화이다. 즉 박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란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균형있는 경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훌륭하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 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새사연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앞으로 한국경제가 살 길은 내수에 있고 “소득주도 성장”은 그 전략이다.

중소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도 지극히 옳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하청업체의 투자를 가로막는 건 무엇보다도 재벌의 하도급 단가 인하이다. 어떤 중소기업이 10,000원짜리 부품에 대해서 기술투자를 해서 이제 9,000원에 생산하게 됐다면 추가 이익이 1000원이 생길 것이고 이 돈은 임금 인상과 추가투자에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모기업이 하청단가를 1,000원 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확히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삼성과 현대차의 어마어마한 수익에는 이렇게 이전된 이익도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청기업들의 단체교섭이나 단가 인하 규제와 같은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속 빠지고 대기업과 함께 사이 좋게 외국에 진출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결국 대선 때의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로 탈바꿈했고 그 결론은 민영화와 규제 완화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도 마지막 결론에 있다. “내수 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 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주 익숙한 얘기다.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를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선언하고 보건의료와 교육의 민영화에 본격 나섰다. 지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묘수처럼 선보인 정책이 이제 정책기조가 된 것이다. 본격적으로 “줄푸세”의 “푸”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저항하면 “세”를 내세우겠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금년은 박근혜정부와 시민, 노동자의 일대 결전이 벌어지는 해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창조경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창조경제타운”, “창조혁신센터”에서 여러 기술의 융합을 꾀하겠다는 건데 이 역시 국민의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다. 에너지 환경 분야를 창조경제의 대상으로 삼은 건 그래도 일보 진전인데 기껏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머무르고 말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임금인상과 복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3중 전회에서 그리고 아베노믹스는 “임금 서프라이즈”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나 홀로 역주행이다. 이런 정책의 결과는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는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도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빈부격차다. 지난 11월의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 절반(46.7%)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이라고 대답했다. 1988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나아가서 “일생 동안 노력하면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57.9%였다. 박근혜 정부가 그리도 강조하는 행복은커녕 희망마저 잃은 것이다. 새사연

# 2014년 전망 보고서

## 2014년 전망 보고서 목록

날짜	분야	제목	작성자
1월 15일	세계경제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1월 16일	한국경제(1)	스스로 지뢰밭을 만드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1월 17일	한국경제(2)	추후 공개	여경훈
1월 20일	복지정책(1)	추후 공개	이은경
1월 21일	복지정책(2)	추후 공개	이은경
1월 22일	주거정책	추후 공개	강세진
1월 23일	돌봄정책	추후 공개	최정은
1월 24일	노동·고용	추후 공개	김수현
1월 25일	종합	추후 공개	새사연

### 2014년 전망 보고서 발간

불안한 미래,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2014년 전망 보고서.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경제/노동/주거/복지 분야]

### 정회원 가입하기

새사연은 회원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독립 민간 연구원입니다.  
2012년 한국경제신문 선정, 국내 100대 싱크탱크 4위, 더 나아가겠습니다.